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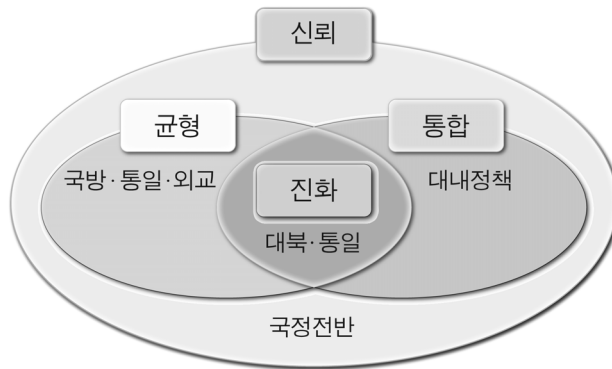
신뢰·균형·통합·진화의 대북·통일정책

전 성 훈*

- I. 신뢰: 박근혜정부의 국정 키워드
- II.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III. 국방·통일·외교의 동적인 균형
- IV. 남남통합과 남북통합
- V. 대북·통일정책의 합리적인 진화
- VI. 결론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은 ‘신뢰(Trust)’와 ‘균형(Alignment)’,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진화(Evolution)’이다. 신뢰는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큰 틀의 철학적 개념인 반면, 균형은 국방·통일·외교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¹ 통합은 국내정책과 남북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진화는 대북·통일정책에 국한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가지 핵심 개념이 적용되는 국정분야를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신뢰·균형·통합·진화



* 통일연구원 원장

¹ 국방, 통일, 외교의 순으로 분야를 정한 것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추진전략의 우선순위를 따랐다.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2013년 5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 추진계획도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다.

I. 신뢰: 박근혜정부의 국정 키워드

신뢰(Trust)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를 관통하는 키워드이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을 준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 정부가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유능한 ‘신뢰받는 정부’를 기반으로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² 아울러 인수위는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다음을 제시했다.³(<부록 1> 참조)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2013년 5월 28일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그간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추진계획을 보완해서 이를 발표했다.⁴ 확정된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인수위 안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이 조정되었다.

- 국정비전의 변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 ‘희망의 새 시대’
- 국정목표의 대체: 5대 국정목표 → 4대 국정기조
- 추진전략의 축소: 21대 추진전략 → 14대 추진전략

박근혜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새로 설정한 4대 국정기조는 다음과 같다.

-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2013년 3월, p. 39.

³ 위의 글.

⁴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2013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도 참고자료, 2013년 5월 28일.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및 기조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희망찬 새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적 여정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국민들께 드린 약속은 꼭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중시해왔다.

‘신뢰’는 국내정책에 국한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국제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를 포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2011년 가을 Foreign Affairs에 처음 소개된 ‘Trustpolitik’은⁵ 이러한 국정철학의 구현이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통일·외교 정책의 기본 틀이다. Trustpolitik은 서독의 ‘Ostpolitik’과 노태우 정부의 ‘Nordpolitik’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는 큰 틀의 정책적 구상이다.

인수위는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방, 통일, 외교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⁶(<부록 2> 참조)

<추진전략 1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는 안보태세를 구축한다.

<추진전략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한다.

<추진전략 21>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 동아시아 평화 및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 안정을 공고화한다. 이와 함께 ‘행복한 지구촌’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지향한다.

2013년 5월 28일 확정된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맞춰 세 가지 추진전략을 단순화해서 제시했다.⁷(<부록 4> 참조) 그리고 각 추진전략의 설명으로 인수위가 제시했던 추진전략을 명기했다.⁸(<부록 5> 참조)

⁵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1), pp. 13~18.

⁶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p. 43.

⁷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p. 3.

⁸ 국무조정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p. 4.

- <추진전략 11>: 튼튼한 안보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 <추진전략 1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 <추진전략 13>: 신뢰 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추진전략 별로 추진해야 할 세부 국정과제도 제시되었는데, 분야별 국정과제는 인수위 안과⁹(<부록 3> 참조) 5월 28일자 국무회의 안이 번호와 내용 면에서 모두 동일하다.¹⁰(<부록 6> 참조)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국정목표가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이란 국정기조로 그대로 살아남고 추진전략에 약간의 표현상의 변화만 있는 것은 물론 17개 추진과제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은 국방·통일·외교분야에서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안이 사실상 그대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분야의 추진전략 별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9/11>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튼튼한 안보

- ▶ 국정과제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 국정과제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 국정과제 119: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 ▶ 국정과제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 ▶ 국정과제 121: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 ▶ 국정과제 122: 명예로운 보훈
- ▶ 국정과제 123: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추진전략 20/12>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 국정과제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 국정과제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 국정과제 126: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추진전략 21/13>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신뢰 외교

- ▶ 국정과제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 국정과제 128: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 국정과제 129: 신항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 ▶ 국정과제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 ▶ 국정과제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 ▶ 국정과제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 국정과제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⁹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2, 2013년 2월, p. 6.

¹⁰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p. 11.

II.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있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거나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일차적 책무로 각인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방향설정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라는 ‘정치적, 사회적 자본(political, social capital)’을 부여받고자 한다. ‘신뢰의 자본(trust capital)’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집행되면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① 국방분야에서의 튼튼한 안보, ②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③ 대외관계에서의 신뢰 외교가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의 국정철학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서 단계적, 기능적 접근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이자 국방·통일·외교 분야를 대표하는 주제가 바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점과 4대 국정기조의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사실은 민족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접촉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2013년 3월 27일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북한이 변화를 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한 북한이 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중국을 포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

래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이나 도발 내지는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¹¹

특히 박근혜정부는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낮은 단계의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신뢰구축과 북한사회의 체질개선을 병행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신뢰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세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다.¹²

-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남북 간 호혜적 경제·사회·문화 교류 증진
-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또한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3단계 통일구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행복한 통일로 나아가는 가교이다. 박 대통령은 2007년 4월 서울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평화정착 → 경제통일 → 정치통일’로 이어지는 통일구상을 밝힌 바 있다.¹³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지키는 평화’라고 한다면,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평화’이다. 3단계의 신뢰프로세스가 완성되면 남북한은 사실상 경제통일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정치통일을 마지막으로 둔 것은 ‘상이한 체제의 대립’이라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직시한 조치이다. 북한동포의 ‘먹는 문제’는 해결한 후에 정치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기도 하다.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의 ‘3대 원칙’을 토대로 행복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3대 통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¹⁴ ①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②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 민

¹¹ 청와대 홍보수석실,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2013년 3월 27일.

¹² 새누리당,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 2012년 11월 5일.

¹³ 박근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선택,”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 2007년 4월 9일.

¹⁴ 박근혜,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 평화와 협력의 뉴프론티어,”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 2012년 11월 8일.

족 대통합의 통일, ③ 아시아의 협력과 공동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화합의 통일이 그 내용이다. 즉, 신뢰프로세스는 ‘통일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수단인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개성공단 조업중단의 여파로 신뢰프로세스가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신뢰프로세스는 이미 조용하게 작동해왔다고 봐야 한다. 대북차원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내차원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국제차원에서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높아지는 등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일관된 대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크게 감명 받았다는 입장이다.¹⁵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방미와 6월 방중을 통해서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미중 양국의 입장도 재확인되었다.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긍정적 행동에는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더 큰 긍정을 창출하고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긍정적 행동으로 바꾸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되는 입체적 프로세스이다. 북한의 부정적 행동으로 야기된 남북관계의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신뢰프로세스의 일부인 것이다. 외견상 대화가 중단되고 긴장이 조성된다고 해서 ‘불신프로세스’라고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다.¹⁶

신뢰프로세스 하에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는 대화의 여지없이 원칙만 고수한다고 지적받던 시기의 긴장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신뢰프로세스가 지향하는 관계개선은 퍼주고 끌려 다닌다고 지적받던 시기의 관계개선과도 다르다. 북한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신뢰구축의 중요한 축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27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실천 가능한 약속의 이행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임으로 약속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신뢰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¹⁵ 필자를 포함한 통일연구원 전문가들이 2013년 3월 28일 북경 개혁개방논단을 방문해 가진 회의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피력한 의견임.

¹⁶ 일각에서는 2013년 상반기의 개성공단 사태 등을 보면서 남북간에 불신프로세스가 펼쳐지고 있으며, 신뢰라는 정부의 말과 불신이라는 남북관계의 현실이 충돌한다고 보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운명,” 『한겨레』, 2013년 5월 31일.

우선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깐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도발이나 핵실험에 대해 결코 북한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통한다면 북한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¹⁷

Ⅲ. 국방·통일·외교의 동적인 균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명제가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전제인 것이다. 강력한 안보와 남북대화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 신뢰프로세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보와 대화 사이에서 ‘동적인 균형(dynamic alignment)’을 잡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균형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Foreign Affairs 기고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¹⁸

- 구조: 균형이란 한국의 국가안보와 북한과의 협력 사이의 균형과 남북대화와 국제적 규범 사이의 균형이 국민적 지지로 뒷받침되고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역할: 균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유연한 원칙으로서 Trustpolitik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토대: 균형을 확고하게 견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하나는 북한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강력하고 믿을 만한 억지태세를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핵이나 재래식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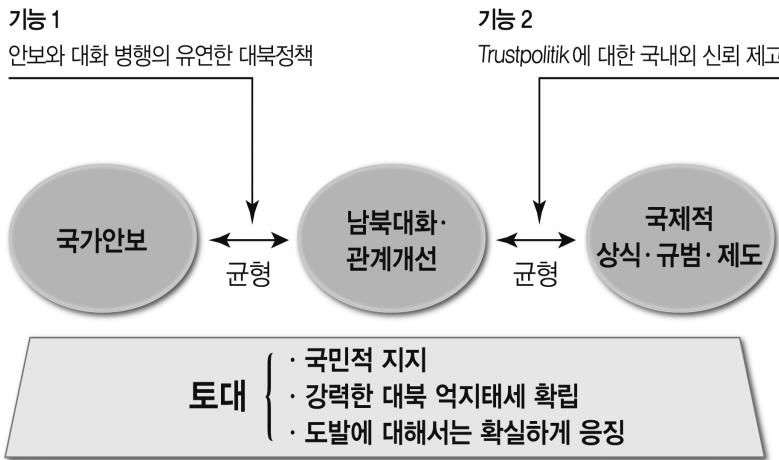
이러한 균형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균형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관계 및 국내

¹⁷ 청와대 홍보수석실,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¹⁸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1), pp.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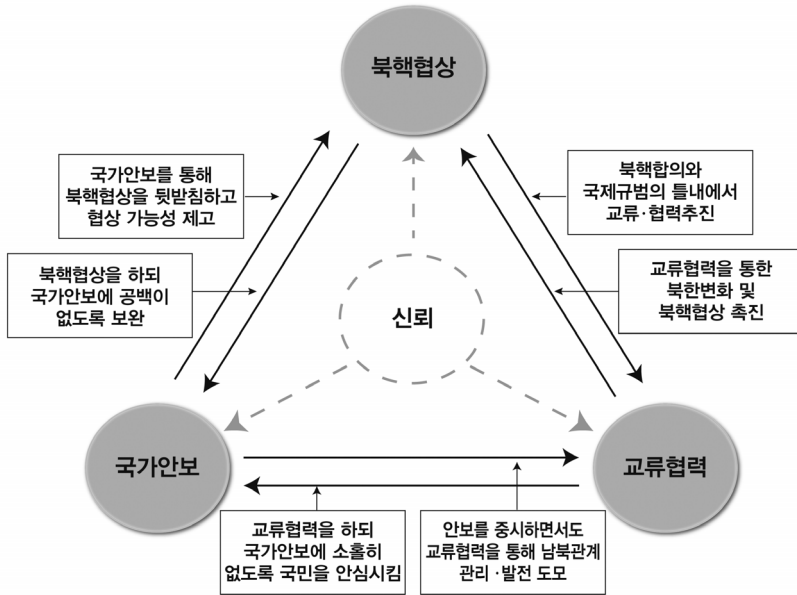
외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남북대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환경과 남북대화 사이에 순발력있게 역동적으로 균형을 잡아나감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Trustpolitik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내적 신뢰도 제고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과 국제화된 국민의식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은 반드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균형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 균형의 구조·기능·토대



동적인 균형의 개념을 당면 현안인 북핵문제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핵협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구도에서 동적인 균형을 <그림 3>에서와 같이 잡아나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국방), 교류협력(통일), 북핵협상(외교)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양자 간에 쌍방향적으로 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한다. 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남북 간에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 한국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등 '신뢰의 망'이 동적인 균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림 3> 국방·통일·외교의 동적인 균형



첫째, 국가안보와 북핵협상 사이에 균형을 잡는다. 국가안보에 빈틈을 주지 않으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핵협상을 힘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정치·군사적으로 무기화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협상에 응할 가능성을 높인다. 다른 한편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다각적인 협상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되 협상 자체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거나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허위 안보감(false sense of security)’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즉, 북핵협상이 우리의 정신무장 해이 및 안보태세 이완을 야기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억지태세를 갖춘다.

둘째, 북핵협상과 남북한 교류협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다.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북핵협상과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되 남북협력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의 틀 내에서 진행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가동되고 있는 일련의 대북 제재결의를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그 틀 안에서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나간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북핵협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의 지도부뿐 아니라 북한사회 전체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계산방식과 생각을 바꾸고 핵개발을 단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핵협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와 남북한의 교류협력 간에 균형을 잡아나간다. 국가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에는 철저히 대비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해나간다. 안보에만 매몰되어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실책을 범하지 않고자 한다. 오히려 남북대화가 활발해질수록 우리사회에 조성될 수 있는 허위 안보감을 차단하고 국가안보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으로 안보가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대화의 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의 축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역량이 안보 쪽으로 많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수레의 또 다른 축인 대화의 바퀴는 엄연히 존재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에서 보듯이, 위기국면이 진정되면서 신뢰프로세스는 다시 균형을 잡고 대화의 바퀴를 굴리게 되었다.

이는 마치 북한의 도발로 인해 자욱하게 생긴 ‘적대감의 안개(fog of animosity)’로 가려졌던 대화의 수레바퀴가 국면전환으로 안개가 사라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신뢰프로세스는 결코 북한에 대해 순진하고 감상적인 기대를 갖거나 무모하게 일방적으로 다가서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큰 틀의 상호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V. 남남통합과 남북통합

통합(Integration)은 대내정책과 통일정책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의 통합을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제시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세대·빈부 등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구상으로 통합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예를 들어, 박대통령은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며 발표한 연설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길에 모든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부터 대화합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면 그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5천만 국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¹⁹

박대통령은 2012년 11월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기초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통합을 통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며 그 완성은 통일한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은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²⁰

아울러 100% 대한민국의 완성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여정의 출발점에서 신뢰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 이것이 제가 그리 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민적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²¹

또한 박대통령은 2012년 11월 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에서 통합의 리 더십으로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세계의 친구들에게 나눔과 우정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오늘 격변하는 세계사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는 선장의 심정으로 이

¹⁹ 박근혜 후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2012년 8월 20일.

²⁰ 새누리당,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초 및 과제」.

²¹ 위의 글.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에 강한 준비된 리더십, 신뢰받는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나눔과 우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한반도를 평화와 협력의 뉴 프론티어로 만들겠습니다.²²

한편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초로 민족통합의 철학을 대북·통일정책에 구현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북한·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남남갈등을 남남통합으로 전환하고,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남북분단을 남북통합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넘어서 통합으로’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의 대북·통일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일의 환경이나 과정, 방법에 치중하는 기존의 담론에서 탈피해서 구체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일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야 성공적인 통일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대통령은 2012년 11월 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에서 3대 통일원칙을 제시하면서 ‘민족 대통합’의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둘째,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입니다. 남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한반도 전역에서 인권과 자유,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는 ‘민족 대통합’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²³

더 나아가, 박근혜정부는 민족통일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와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승화시켰다. 통일과 통합, 광복과 건국을 하나로 융합시켜 통일된 단일민족국가의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 8·15 경축사에서 박대통령은 통일의 중요성과 우리 시대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

²² 박근혜,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 평화와 협력의 뉴프론티어,”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 2012년 11월 8일.

²³ 위의 글.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와 국정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²⁴

민족통일이 단순히 남과 북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근시안적인 현상타개책이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일제의 침탈로 찢겨지고 조각난 우리의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통합된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해서 한민족 응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전환점이자 국운상승의 기회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대북·통일정책의 합리적인 진화

진화(Evolution)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지향점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통령 후보로서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대북정책 진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합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며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²⁵

진화하는 대북정책을 제시한 배경에는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화로, 이명박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강경으로 묘사하곤 한다. 대북정책의 ‘합리적인 진화(resonable evolution)’는 유화나 강경의 양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토대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진화의 기본 취지는 과거 정책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진화의 핵심 요소가 바로 남북한이 과거에 합의한 사항들을 존중하고

²⁴ 「청와대 뉴스」, <<http://president.go.kr/>>, 2013년 8월 15일.

²⁵ 새누리당,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실천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2012년 2월 28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발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또는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생겨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깨뜨리는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²⁶

이런 점에서 진화의 개념은 대북정책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정책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대북·통일정책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진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북·통일정책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국민 공감의 정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3대 통일 원칙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에 구현되어 있기도 하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내용이 널뛰듯이 변화한다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약속한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기초를 발표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²⁶ 박근혜, “새로운 한반도와 신뢰 프로세스,”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2012 한반도정상회의』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2012년 2월 28일).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²⁷

한편, 대북정책의 진화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과거에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왜곡된 관행은 바로잡고, 잘못된 병폐와 악순환의 고리는 끊는 ‘조정(reset)’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15 경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²⁸

또한 박대통령은 2013년 5월 6일 미국 방문 중 가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박을 하고 또 도발을 하면 또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참을 가다가 또 도발이나 협박이 있으면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주장했다.²⁹ 5월 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와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한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신뢰구축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³⁰

2013년 5월 15일 언론사 정치부장과 가진 만찬에서 박대통령은 한국이 악순환

²⁷ 새누리당,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

²⁸ 「청와대 뉴스」, <<http://president.go.kr/>>, 2013년 8월 15일.

²⁹ 「연합뉴스」, 2013년 5월 7일.

³⁰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문 전문,” 「청와대 뉴스」, 2013년 5월 9일.

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협박하면 또 가서 협상해서 지원하고 원조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의지다. 이런 의지를 말대로 실천하는 것이 역지력이다.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북한이 변하도록 노력과 힘을 써 나가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도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³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입각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2013년 상반기에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로 촉발된 수 개월간의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관계를 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체력을 다지는 길이며,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굳건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국가정체성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토대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북한을 관리하면서 ‘접촉을 통한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그 실천수단의 세 가지 축은 바로 동적인 균형과 남남·남북통합 그리고 합리적인 진화이다. 우선 정세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역동적으로 억지와 대화의 균형을 잡는 균형전략이 첫 번째 축이다. 국민통합을 이뤄 남남갈등을 없애고 남북통합을 통해 진정한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통합이 두 번째 축이다. 마지막으로, 건국 이후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대북·통일정책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해서 발전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진화가 세 번째 축이다. 과거 남북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잘못된 병폐를 버리고 왜곡된 관행은 바로잡음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도 진화의 한 측면이다. 즉, 신뢰를 토대로 한 균형·통합·진화의 3박자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들과 차별화시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일각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프로세스 = 대북·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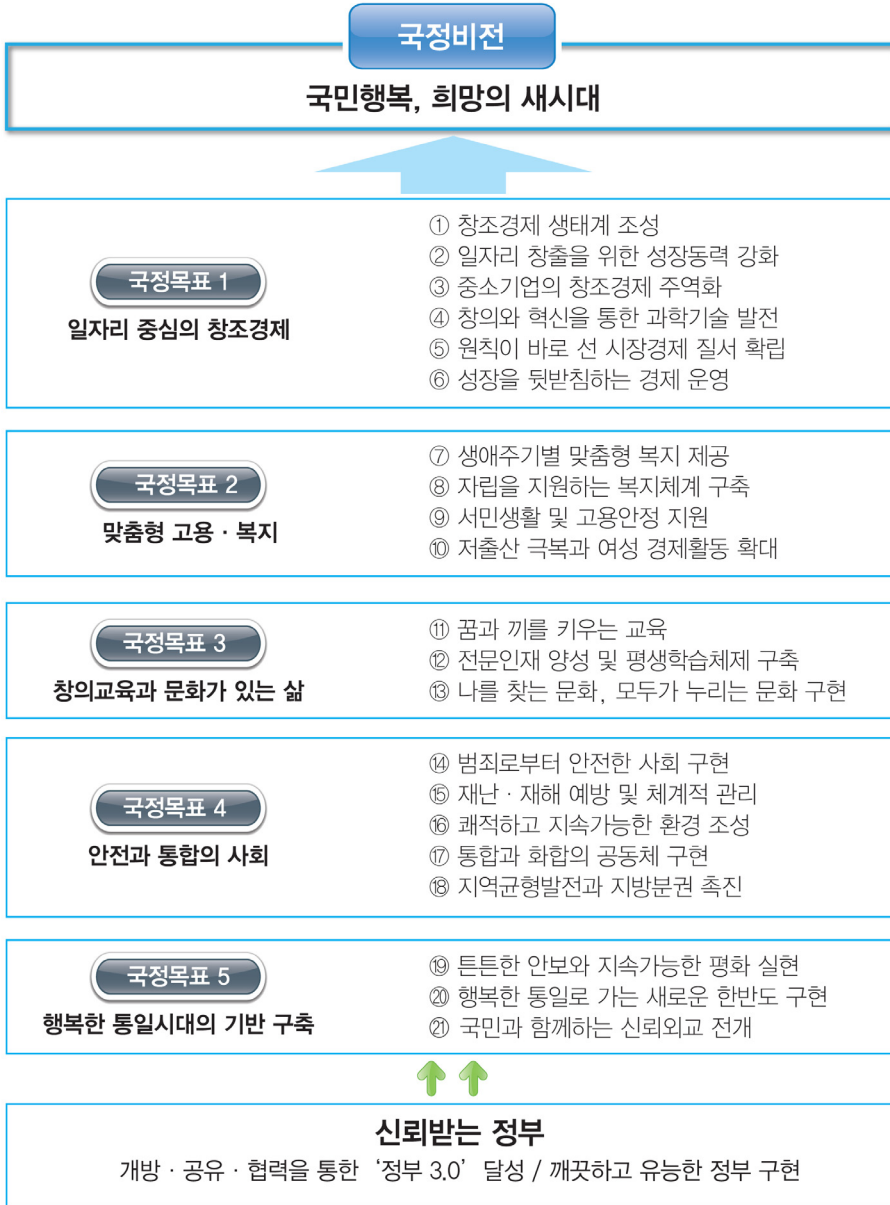
³¹ 『중앙일보』, 2013년 5월 16일.

일정책'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뢰프로세스는 대북·통일정책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이다. 굳이 수학적 도식으로 표시하자면, '신뢰프로세스 C 대북·통일정책'이라는 부분집합의 등식이 성립된다. 오히려 인수위에서 통일분야의 추진전략으로 삼은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이나 국정기조인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① 남북대화, ② 통일외교, ③ 대내역량이 그것이다. 첫째, 남북대화 차원의 정책으로서 신뢰프로세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접촉과 연계를 강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교류·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신뢰프로세스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일부분이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통일분야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이 남북대화 차원의 대북·통일정책에 해당한다. 둘째,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외교를 강화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분야의 국정과제 가운데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의 일부분이 통일외교와 관련이 있다. 통일외교는 국제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세부 목표로 삼는다. 셋째, 대내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방지하면서 통일준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통일분야의 국정과제인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과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 접수: 10월 31일 ■ 심사: 11월 06일 ■ 채택: 11월 18일

<부록 1>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목표·전략(인수위)³²



³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p. 39.

국정목표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신뢰와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모범국가로서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전략 1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는 안보태세를 구축한다.

전략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한다.

전략 21

국민과 함께하는 신로외교 전개

동아시아 평화 및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 안정을
공고화한다. 이와 함께 '행복한 지구촌'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지향한다.

³³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p. 43.

<부록 3>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정 목표·전략·과제(인수위)³⁴

국정목표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추진전략 1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국정과제

-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119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 121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 122 명예로운 보훈
- 123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추진전략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정과제

-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126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추진전략 21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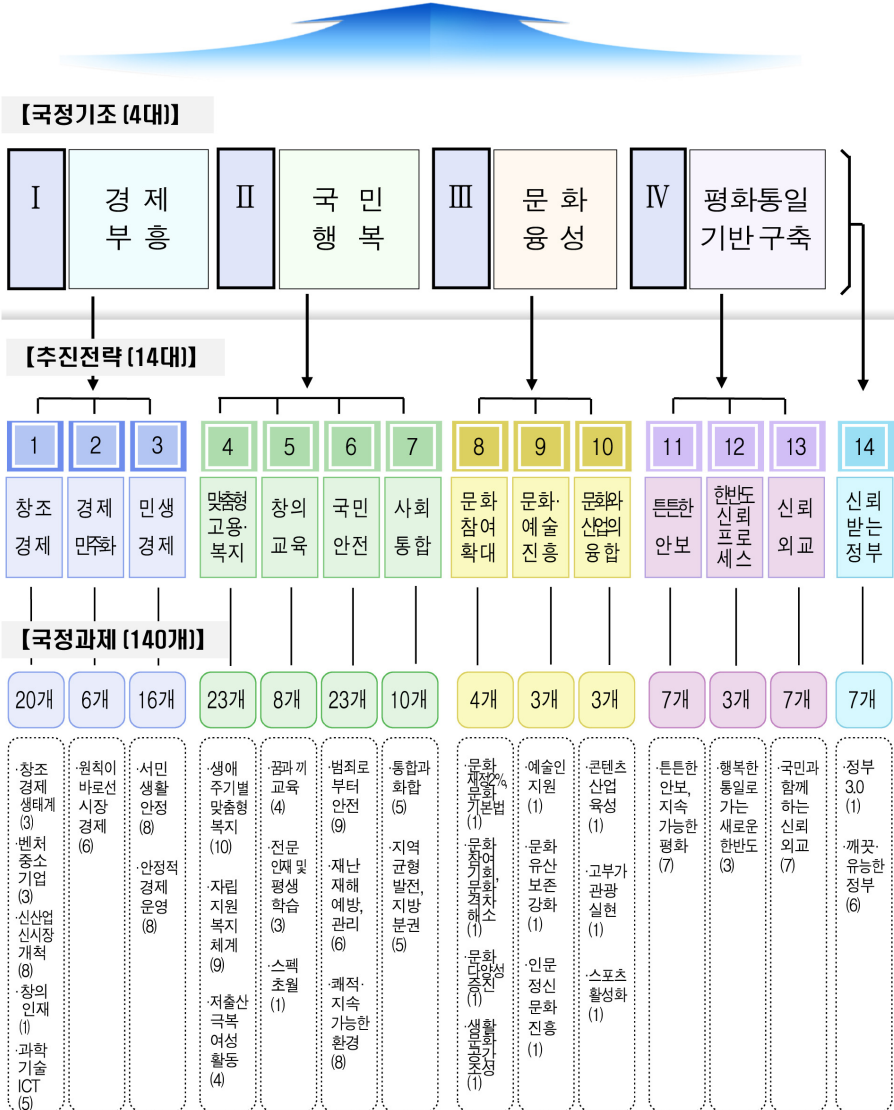
-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128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³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2, p. 6.

【국정비전】

희망의 새시대

“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



³⁵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p. 3.

<부록 5> 4대 국정기조와 추진전략(국무회의)³⁶



경제부흥

42개과제

창조 경제	창조경제 생태계 벤처 중소기업 신산업 신시장 개척 창의인재 과학기술 ICT
경제 민주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
민생 경제	서민생활 안정 안정적 경제 운영

국민행복

64개과제

맞춤형 고용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지원 복지체계 저출산 극복 여성 활동
창의 교육	꿈과 끼 교육 전문 인재 및 평생학습 스펙 초월
국민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 재난재해 예방, 관리 쾌적·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통합	통합과 화합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신뢰받는 정부 7개과제

문화융성

10개과제

문화 참여 확대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문화다양성 증진 생활문화 공간 조성
문화 예술 진흥	예술인 지원 문화유산 보존 강화 인문정신 문화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고부가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

17개과제

튼튼한 안보	튼튼한 안보, 지속 가능한 평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신뢰 외교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³⁶ 국무조정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p. 4.

국정기초 4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전략 11

튼튼한 안보

국정과제

-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119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 121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 122 명예로운 보훈
- 123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추진전략 1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정과제

-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추진전략 13

신뢰외교

국정과제

-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128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³⁷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p. 11.